

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19건의 개선·통보 및 현지 조치

구분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일반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시정 완료 (금액)	모범			
합계	19							2		5				2			10
부의	19							2		5				2			10
위임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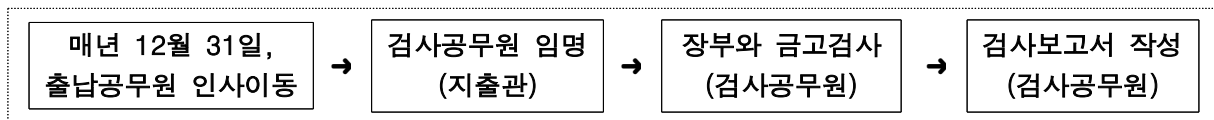
일련 번호	조치기관	제 목	처분요구 종류
1	운영지원과	금고검사 등의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 마련 필요	통 보
2	운영지원과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검토체계 보완 필요	통 보
3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 성능 점검방법 개선 필요	통 보
4	장비기술국 (장비관리과)	무기탄약고 위탁관리 근거규정 마련 필요	통 보
5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이동식 황 분석기 관련 세부 기준 마련 필요	통 보
6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점검 방법 개선 필요	개 선
7	수사국 (형사과)	수사·감식장비 관리체계 개선 필요	개 선

2. 주요 지적사항³⁾ : 7건

(1) 금고검사 등의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 마련 필요

□ **판단기준**(금고검사의 주체와 절차, 운영지원과 지시사항 등)

- 지출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 등에 따라
^①매년 12월 31일, ^②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 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담당한 장부(d-Brain)와 자금을 검사
-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를 본청 운영지원과(경리계)에서 시달(2020. 12월)한 기준(양식)에 따라 금고검사보고서(카드, 현금, 유가증권, 보관금 등 4개 항목)를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보고



□ **문제점**

- 최근 5년간 5개 지방청(소속관서 포함)의 금고검사 운영실태 점검결과, 검사대상 총 258회 중 52회(20%, 연도말 130회 중 13회, 인사이동 128회 중 39회) 검사 미실시

지방청별 출납공무원 장부 및 금고검사 미실시 현황 (2020. 1. 1.~2025. 3. 31.)

지방청별 (소속관서 포함)	금고검사 미실시 내역(회)			
	회계연도 마감		출납공무원 교체	
	대상	미실시	대상	미실시
합계	130	13 (10%)	128	39 (30%)
○○지방청	30	3	30	10
○○지방청	30	2	32	10
○○지방청	30	—	28	9
○○지방청	25	5	25	6
○○지방청	15	3	13	4

3) 본 요약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보고용으로서, 일부 문안이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수 있음

○ 금고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 대부분 소속관서는 검사공무원 지정 기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外 사람)에 맞지 않게 지출관 자신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

△ 지출관 소관 업무를 자신이 검사하는 체계로 신뢰성 저하

- 금고검사는 각 관서에서 관리 중인 계좌와 장부(d-Brain)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금고 內 내용물 (카드, 현금, 유가증권, 보관금 등) 보관유무 및 금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

■ 보관금의 경우 관서별 금융기관에 예치된 계좌잔액이 있는데도 d-Brain에 관리되지 않는 세입세출외현금 등을 제외하고 검사보고서에 금고 안의 잔액인 “0원”으로 기재

⇒ 검사보고서 상 계좌별 합계액과 장부(d-Brain)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금고검사 체계 운영 중

□ 조치사항

○ 위 감사결과 중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하여는 운영지관과(경리계)에서 2025. 5. 12.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기준 을 전 소속기관에 시달하는 등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니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

- 향후 검사공무원 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및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검사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통보)

(2)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검토체계 보완 필요

□ 판단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따라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되,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설정하지 아니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②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②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경리계)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입찰·계약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조치 필요

□ 문제점

- ○○해경서 계약담당공무원은 2020. 1. 29.(2021. 7. 21. 준공) 「○○해경서 청사신축(소방)」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짧게 설정

○○해경서: ○○해양경찰서 청사신축(소방), 계약금액: 624,000,000원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 설정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의무사항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관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반면,
- 일부 관서는 2022년부터 2025. 4월까지 총 20건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3천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미설정하여 하자발생 시 수요기관 부담 예상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안건번호 23-0008)

지방자치단체장등은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및 제7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치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각 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종류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3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하는 방안 마련(통보)

(3)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 성능 확인 기준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시 등록기준에 맞는 비상구조선(3인 이상, 20노트 이상)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 문제점

-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 총 221대 중 87대만 속도를 실측하였고, 서류검사를 한 134대 중 106대는 평수구역 운항 레저기구로 검사증서 상 속도 미기재 대상임에도 속도 미실측, 등록
- 이번 감사 시(2025. 5. 20.) 비상구조선 15마력(총 6대) 중 무작위로 1대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과거 실측 당시(2023. 8. 29.) 18노트로 기준 미달임에도 등록 승인하였고, 이를 실제 검증*한 결과 12.8노트로 속도 기준에 미달 (정비명령 대상)

* ○○○○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 최대속도를 2회 측정한 결과, 평균 12.5노트로 비상구조선 요건인 20노트를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 조치사항

- 구조안전국장(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구조선의 속도를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성능 미달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방안 마련(통보)

(4) 무기·탄약류 위탁관리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2024. 11. 7. 개정 전의 것)」 제15조 등에 해양경찰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탄약 등을 확보하여 보급하되

파출소·출장소에 배정된 무기·탄약을 자체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군부대 등에 위탁보관하고, 월 1회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 그간 무기탄약고를 보유하지 않은 관서(8개)는 인근 해양경찰 관서에 무기탄약을 위탁보관·관리

무기탄약고를 보유하지 않은 관서(8개)의 위탁관리 현황

구 분 (미보유 사유)	○○○ (임차)	○○○ (민원)	○○○ (공간부족)	○○○ (민원)	○○○ (동일장소)	○○○ (임차)	○○○ (임차)	○○○ (동일장소)
보관장소	△△	△△	△△	△△	△△	△△	△△	△△
거 리	4km	28km	5km	4km	0km	69km	40km	0km
점검방식	-	주, 월	6월	월	월	월	월	일, 주, 월

□ 문제점

- 2024. 11. 7. ○○○○과는 통합보관 공간부족, 무기탄약고 수시 개방(점검, 훈련)에 따른 보관관서 업무부담 및 불편함 등을 이유로 위탁보관 관련 규정 내용을 삭제
- 위탁 관서 무기·탄약 위탁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시사항으로 삭제한 규정을 시달(2025. 1. 10. 「탄약관리를 위한 봉인지침」)하는 등 무기·탄약 위탁관리에 혼선 가중

□ 조치사항

- 장비기술국장(장비관리과장)은 앞으로 행정규칙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에 위탁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마련(통보)

(5) 이동식 황 분석기 운용 관련 세부지침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초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황 분석기 25대를 사용 중
- 황 분석기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결과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정계량 장비임을 고려하여 검·교정 필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절차

- | | |
|--|-----------------------|
| ① 선박 승선, 선박연료유 채취 | ② 1차 이동식 황 분석기 측정 |
| ③ 1차 허용범위 초과 시 2차 분석기관 의뢰 | ④ 허용범위 2차 초과 시 수사과 통보 |
| ☞ 황 함유량 초과 시 출항금지 및 부적합 연료유 처리 명령(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문제점

- 이동식 황 분석기는 검·교정 및 분석데이터 저장 기준이 없어 보유 2종(호리바 19대, 브루커 6대), 총 25대 중 최근 1년 이내 17대만 검·교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8대는 실시하지 않는 등 측정값의 신뢰성이 우려
- 또한, 도입 장비 중 호리바(日, SLFA-60)는 자동 저장기능이 없는 등으로 그간 측정한 분석결과의 저장 이력이 미 존재

□ 조치사항

- 해양오염방제국장(해양오염예방과장)은 이동식 황 분석기의 검·교정 및 분석 결과 이력 관리기준 마련(통보)

(6)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점검 방법 개선 필요

□ 판단기준

-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제11조 등에 운용자는 해양 응급의료시스템(경비함정 161척 설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출동 전에 권역별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지정병원(6개소) 응급실과 시스템에 연결하여 점검하도록 규정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현황

- ✓ (구축기간) 2009 ~ 2012년 (이후 신조함은 설치되어 건조)
- ✓ (구축비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115억 원 (함정 1척 당 약 4천만 원)
- ✓ (함정척수) 161척 (대형 38척, 중형 43척, 소형 80척)
- ✓ 지정병원 6개소: 인천 길병원, 목포 한국병원, 여수 전남병원, 강릉 동인병원, 제주 한라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 문제점

- 응급실과 주 1회이상 출동 전에 의료지원을 위한 연결이 아닌 유지보수업체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의료장비 이상유무와 구급 의약품 구비 여부를 위한 잦은 연결로 신뢰성 저하
-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호출하면 즉시 응답하지 않는 등 시스템 연결, 점검 방법에 대해 불만

□ 조치사항

- 구조안전국장(수색구조과장)은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에 경비함정에서 지정병원 응급실에 연결, 점검하는 목적과 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개선)

(7) 수사·감식장비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판단기준

- 「수사 및 감식장비 관리규칙」 제10조에 수사·감식장비 등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 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 수사·감식장비 총 57종 중 감식(鑑識)장비인 마약탐지장비(이온 스캐너, 라만분광기)는 정밀분석 장비로서 관리부실에 의한 마약 탐지 오류 발생 시 수사의 신뢰성 문제 등 분쟁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마련 필요

다른 기관 마약탐지장비 논란 사례

- ✓ 6,000만원 짜리 마약 감지기' 오검출로 구속 취소.“책임소재 논란” ('24. 8. 15. 전북일보)
- ✓ 경찰이 구속 수사까지 했는데...“마약 검사가 오류라니” ('24. 11. 3. KBS뉴스)
- ✓ 마약탐지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수색한 세관 ('24. 11. 18. 한국경제)

□ 문제점

- 규칙상 수사·감식장비(마약탐지장비)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없어 운용부서마다 관리 방법이 상이⁴⁾
- 특히, 관세청과 비교해 볼 때 장비 유지·보수에 있어 기본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제작사 매뉴얼 상 소모품 교체(연간, 반기 등) 여부도 확인이 어려움

4) 사용대장만 작성하거나, 사용대장에 형식적인 장비점검을 함께 기록 (소모품 교체 등 점검 내용 미포함)

다른 기관(관세청) 마약탐지장비 관리 방법 비교

구분	해양경찰청	관세청
장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장비 점검표 (X) • 자체점검 (O) • 전문업체 점검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장비(3종) 점검표 (O) • 자체점검 (O) • 전문업체 점검 (O)
정비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카드 및 사용대장 (O) • 정비대장 기록·유지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카드 및 사용대장 (O) • 정비대장 기록·유지 (O)
부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모품 등) 관리대장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모품 등) 관리대장 (O)

자료: 「수사 및 감식장비 관리규칙」,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수사국장(형사과장)은 수사·감식장비(마약탐지장비 등)의 보관·관리 체계 미흡으로 수사 신뢰성이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별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개선)